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전후한 노동자 파업의 효과

노동자운동연구소(준)

1. 취지

이명박 정부의 단호한 반노조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은 민주노조 운동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통과된 노조법 개악안이 노조 사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빠른 경제 회복에 힘입은 정권이 더욱 자신감 있게 민중운동 진영을 압박해 올 것. 민주노조 운동 진영이 정권의 탄압을 견뎌내고 노동조합을 강화할 수 있다면 노동자운동의 장기적 발전 초석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정권의 탄압에 꺾인다면 80년대 영국 노동조합 운동과 같은 추락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올 4~5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화물 철도 금속 등 주요 노동조합들 역시 상반기 중 파업 투쟁을 고려. 시기적으로 7월1일부터 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 시행되고, 6월2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다는 점이 전술적으로 중요. 특히 6월 지자체 선거는 대선 직전 치루어진 총선 이후 치루어지는 첫 전국 선거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는 점에서 주요 정치 세력들에게 매우 중요.

이에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선거 전후 노동자 파업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상반기 투쟁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본 보고서의 관심은 선거 시기 여당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서 노동자 투쟁의 영향력인 만큼 정권의 교체와 관련된 대통령 선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90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이전 노동자 투쟁이 선거 및 노조 교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2. 1992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주요 선거(총선, 지방선거)와 파업

1> 1992년 총선

- 1992년 3월 24일 진행된 총선에서는 3당 합당을 한 민자당은 149석(득표율 38.5%)로 예상보다 적은 의석 차지. 13대에 이어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됨.
- 총선과 연계한 파업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산하 버스노조 지부의 투쟁으로 서울 등 6개 도시에서 2월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한 것. 주요 의제는 임금인상 건. 버스노조의 국가 선거 직전 파업은 이후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사업주와 어용 버스노조가 선거 시기를 이용하여 정부 당국에 요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 이해를 갖기 때문. 어용노조는 양보교섭으로 임금인상을 최초 제시한보다 50% 이하로 합의하고, 버스 사업자는 노조 요금 인상안을 핑계로 당국에 지원금 또는 버스 요금 인상을 압박. 대도시 주요 교통 수단이 버스의 파업은 파급 효과가 큰 관계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도록 하는 정세 조건이 됨¹⁾.

1) 양대석, 1992, 「연례행사, 시내버스 불발파업의 내막」, 『월간말 1992년도 4월호(통권 70호)』.

- 1992년은 91년 12월 정부가 총액임금제 세부지침을 발표하여 연초부터 노자 대립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 하지만 실제로 큰 투쟁은 없었음.

2> 1995년 지방 선거

-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선거.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지역을 휩쓸며 대승하였고, 민중운동 진영 역시 노동자후보가 광역 기초 의원에 67명 당선되며, 정치세력화 운동에 힘을 받음.
-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공안 물의를 단행. 현대자동차 양봉수 열사 투쟁에 대해 5월 19일 공권력을 투입하여 현대차 간부들을 구속하였고, 21일에는 한국통신 투쟁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연초부터 정부가 고의적으로 임단협에 응하지 않으면서, 노조 와해 공작을 펼쳤고, 김영삼 대통령이 한통 노조를 '국가전복세력'으로 지명하며 명동성당,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던 간부들을 공권력을 투입하여 연행.
- 이러한 정권의 노동탄압은 당시 불리하게 전개되던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여 선거 구도를 뒤집어 보려는 정권의 의도였음. 하지만 이러한 공안정국이 선거 구도를 바꾸지는 못함.
- 동시에 노동자운동이 지자체 선거에 몰입하면서 정권과 정면 대결하지 못하며 투쟁 전선이 제대로 서지 못하여 한통노조 지도부 연행, 민주노총준비위원회의 6월 19~24일 집중 임단투 투쟁 무력화,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의 지방선거 이후 연기 등으로 이어졌던 과정도 있었음.
- 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대승, 그리고 민중운동 진영의 선거 약진이었지만 이후 한통 노조는 7월 정부안에 대해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함으로써 선거 전후로 한 투쟁은 패배로 마무리. 진보진영 일부는 서울시를 장악한 민주당이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역시 환상에 불과했음. 지방선거 이후 정권은 더욱 강한 공안 물의를 계획하였고, 민주당은 노조 탄압에 어떠한 울타리도 되어주지 못함²⁾.

3> 1996년 총선

- 1996년 4월 11일 총선. 여소야대가 계속되었으며, 신한국당 139석(득표율 34.5%)으로 예상 밖 선전. 서울에서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승리하며, 신한국당에 유리한 정치 국면 창출.
- 총선을 앞두고 문화방송 노조가 3월 13일 강성구 사장 재신임에 반대하며 전면파업. 총선 직전인 4월 4일까지 파업 진행했으며, 총선 이후 사장 퇴임을 전제로 파업 끝냄. 문화방송 사장의 퇴진 약속은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파업에 부담을 느낀 정부의 공여지책이었는데, 이후 6월에 노조 간부 징계, 보도국 기자 총사표, 사장 퇴임이라는 우여곡절을 다시 겪음.
-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부산교통공단, 조폐공사, 전국의료보험노조 5개사 노조는 연초에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3월 11일부터 2주간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총선 직전 정부 관계 부처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하였고, 22일에는 공공부문 공동 투쟁 진행. 이후 6월 20일 서울대, 명동성당 등에서 집결 투쟁 진행.
- 전국 6대 노시 버스노조는 3월 20일 총파업 결의. 하지만 버스노조의 경우 92년 총파업과 비슷하게 3월 25일까지 교섭을 진행하다 직권조인으로 파업들어가지 않음.

4> 1998년 지방선거

2) 손호철, 1995, 「6.27 지방자치체 선거와 민중운동」, 『이론 1995년 가을 (통권 12호)』.

- 1998년 6월 4일 두 번째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수도권에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승리.
- 1998년 상반기 투쟁은 선거 전후 상황보다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주요 이슈.
- 4월 23일 민주택시노조가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로 파업. 29일 정부가 택시제도개선관련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29일 투쟁 종료. 4월 14에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 결의하며 정부 압박. 기아 파업 결의 등을 계기로 5월 경제 위기설 확산.
- 5월 27~28일 민주노총 총파업하고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0일에 2차 총파업 결의. 하지만 지방선거 직후인 6월 5일 중앙위원회에서 정부 협상안 받아들이며 총파업 철회하고 노사정 위원회 참가 결정. 이후 노사정 합의 미이행에 대해 7월 14~15일 총파업.

5> 2000년 총선

- 2000년 4월 13일 총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득표율 35.9%로 115석 획득. 자민련은 17석, 한나라당은 133석. 여당이 선전한 것으로 평가. 최초로 진보정당으로 출마한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1.19%로 의회진출 실패.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운동이 큰 파장.
- 총선을 앞두고 대우차 매각과 관련하여 대우차노조가 3월 31일부터 자동차 4사가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연대 파업. 3월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전국운송하역노조와 연대하여 전국화물운송노조가 27일 파업을 예정하였으나 철회. 6대 도시 버스 노조가 다시 선거를 앞두고 4월 4일 파업 예정했으나, 4일 밤에 타결. 서울지하철노조가 승무지부가 어용노조의 교섭 내용에 대해 반대하며 7일 저녁 파업 예고하였으나, 7일 밤에 파업 철회. 한국노총 직장의료보험노조가 의보통합에 반대하며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
- 총선 직전 이어지는 노조 파업에 대해 재경부 장관 등 11개부처 장관 명의로 “불법파업과 집단이 기주의 근절을 위한 공동 담화문” 발표.
- 총선 이후 대대적인 노조 탄압. 4월 25일 대우차 경찰 난입, 6월 29일 롯데호텔 노조 공권력 투입, 7월 1일 사회보험노조 공권력 투입 등.
- 2000년 투쟁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하고 진행. 자동차 연대 파업의 경우 총선을 의식하여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총선 지원에 전력. 하지만 총선에서의 패배와 대중적인 투쟁 의지와 전국적 투쟁 전선을 만들지 못한 노동자 운동은 이후 김대중 정권에 게 큰 타격³⁾.

6> 2002년 지방 선거

-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월드컵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가운데, 한나라당이 서울 수도권 기초단체장을 싹쓸이하며 압승.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으나, 전국 득표율로는 자민련 재끼고 3위 기록.
- 2002년 2월 25일 시작한 발전노조 파업과 이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직권조인으로 노동자운동이 매우 어려웠음. 4.2 총파업 철회 이후 지도부 총사퇴.
- 2002년 4월 이후 파업은 지방선거보다는 월드컵을 타겟으로 한 파업이 많았음.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탄압을 계속할 시 월드컵 기간에도 파업하겠다고 선언하며 5월 22일부터 연대파업 선언. 금속노조가 5월 22일 총파업을 선언하였고, 보건의료노조가 23일 파업 선언, 민주택시노조연맹은 13일부터

3) 김승환, 2000, 「민주노총 정치방침, 민주노동당 그리고 4.13총선」, 『현장에서 미래를 56(2000.6)』.

파업 돌입. 한국노총 전국관광노조연맹이 월드컵 개막(31일)에 맞추어 파업 선언했으나 22일 타결.

7> 2004년 총선

- 2004년 4월 15일. 노무현 탄핵 사태로 열린우리당이 154석을 획득하여 여대야소 국면이 열림. 민주노동당 10석 획득하며 최초로 국회 진출.
-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방침 조직과 탄핵무효 범국민대책위 활동에 결합한 것 외에 총선 전후한 투쟁 방침은 없었음.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민주노동당 지지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한 탄압 대응.

8> 2006년 지방선거

- 2006년 5월 31일. 정부 여당의 몰락. 호남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모두 한나라당이 승리.
-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보호법 처리에 대한 총파업, 간부집회, 순환파업 등 진행.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한미 FTA 등과 관련한 투쟁도 동시 진행. 열린우리당을 주요 비판 대상으로 하여 보수 양당 비판하는 선전 집중⁴⁾. 하지만 실제 2,3월 임시대의원대회가 연기되고, 총파업 참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회적 파급력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평가.

9> 2008년 총선

- 2008년 4월 9일 총선. 한나라당 과반수 의석 확보하며 여대야소 국면.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5석 획득으로 16대 국회에 비해 절반으로 추락.
- 공공부문 민영화 흐름에 맞추어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가 2월부터 구성 활동하였고, 총선까지 여론을 만들어 간다는 기조였으나 그다지 활동은 없었음. 이랜드 투쟁 전술로 진보신당에서 전략 공천을 하였으나, 진보신당 원내 진입 실패.

3. 국외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 전후 파업 사례들

- 유럽의 경우 노동당 공산당 등 노동조합 지지 정당이 선거에 주요 참여자로 역할하기 때문에 선거 즈음한 파업 압박은 별로 존재하지 않음. 대부분 선거 캠페인을 위한 활동에 주력.

1> 프랑스

- 몇 가지 사례로 1997년 프랑스 총선을 앞두고 에어프랑스 항공사 노조가 4일간 파업하며 정부를 압박, 임금협상을 승리로 이끈 사례와 비슷하게 2002년 총선 전에도 비슷한 투쟁 전술로 파업 직전

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기간 비정규직 차별 철폐,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저지, 한미FTA저지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을 호소했지만 울산 복구, 동구 수성 실패, 800여명(민주노총 204명) 중 81명의 당선(노동 34, 농민 11명 포함)과 12.1% 226만표를 획득하는데 만족해야 했다.(민주노총, 「2006년 38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임금 협상에서 승리. 2002년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공공부문 운송 노조가 리옹에서 22일간 파업을 진행하며 지방 정부에 승리하여 유리한 임단협 체결.

- 프랑스는 오히려 총선 직후 새 정부가 연금 관련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에 맞추어 투쟁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음. 대표적으로 시라크 정부 출범 직후 1995년 연금 개혁안 발표하자 공공부문을 필두로 프랑스 전역을 한 달 이상 마비시킨 총파업 진행. 90년대 후반의 프랑스 노동운동의 가장 성공적 투쟁으로 이후 정부 임금 개혁안을 좌초시키고 노동조합 조직률까지 상승시킴. 2007년 총선 직후에도 공공부문 연금 관련 파업을 진행하여 연금 개혁안 막아냄.

2> 영국

- 1978~79년 겨울에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로 알려진 대규모 파업 진행. 정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 인상에 대해 5%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발단.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파업이 79년 1월 4일부터 TGWU 소속 운송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파업 진행. 운송 노조 파업으로 약 80%에 달하는 운송부문이 마비되었고, 이후 기업 도산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소요 사태 발생. 결국 이 파업으로 영국 노동당의 30년 집권이 막을 내리고 대처 정부가 들어섬.

- 대처 정부는 80년 82년 두 차례 노조법 개정⁵⁾으로 산별노조 영향력 및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 TUC를 비롯한 노동조합은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83년 선거에서 노동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 총력. 하지만 총선 전 아르헨티나와 포틀랜드 전쟁에서 승리한 보수당 정부 재승.

- 84년부터 85까지 광산 파업 진행. 하지만 대패하고 이후 노동운동 붕괴.

4. 선거에 대한 노동조합 투쟁의 영향력

1> 노동조합 투쟁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비

-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선거 이전 투쟁이 정부 여당에 압박이 된 사례를 찾기 힘들.

-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합 투쟁에 대해 압박을 받는 경우는 여론과 직접적 관련되는 경우로, 방송사나 대중 운송 부분이 대표적. 4.11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96년 문화방송 파업.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파업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사장 퇴진을 약속. 국외사례로는 프랑스에서 총선을 앞둔 1997년 항공사 노조 파업과 지방선거를 앞둔 2002년 리옹 지방 공공 운수 부문 파업이 있음. 물론 프랑스 국민들이 파업에 관해 가지는 태도가 한국보다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버스 파업의 경우 선거 즈음하여 매년 진행되지만 어용 노조와 사측의 지자체를 상대로 한 버스요금 인상 압박에 그치며, 실제 파업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반대로 어용노조가 선거 시기를 앞두고 파업한다고 조합원들을 안심시키며 뒤로는 큰 양보교섭을 하는 작태를 보여줌.

5) 80년 노동법 개정에서 연대 노동쟁의 제한, 작업장 이외의 곳에서 항의 시위 불법화, 클로즈드숍 강제 조항 제한 등을 만들었고, 82년 노동법 개정에서 법정 노동쟁의 범위를 축소하고, 파업노동자를 선택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며,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 총파업을 조직한 사례는 1998년 6.4 지방선거. 하지만 정부의 노동법 개악, 구조조정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이 선전. 여당 승리 이후 6.5 총파업이 철회되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탈퇴를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유래 없는 정리해고 바람에 제대로 된 전국적 투쟁 전선을 만들지 못함.

-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대우차 해외매각 건을 매개로 완성차 4사 공동파업.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선전하며, 별 효과를 보지 못함.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투쟁 계획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지원 사업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파업 투쟁 자체가 크게 이슈화되지도 못했음.

2> 정부 여당은 오히려 정국 장악력을 과시하기 위해 노동조합 투쟁에 비타협적으로 대응

- 선거 즈음한 정부의 노동자 투쟁에 대한 눈에 띄는 태도는 오히려 양보보다는 단호한 대응이었음.

- 95년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정부는 대대적인 공안정국 조성. 한통 파업에 대해 국가전복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대적 탄압을 가했음. 공안정국 조성이 정부 여당에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이 그렇다고 선거 이후 노동조합 투쟁을 엄호해 주었던 것도 아님.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강하게 한통노조를 탄압.

- 2000년 4.13 총선 이전에 발생한 파업(자동차 4사, 직장의보, 하역노조 등)에 대해 관계부처 회담 까지 발표한 김대중 정부는 총선 선전 직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강도를 높임. 대우차, 롯데호텔, 사회보험 등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

3> 진보정당 출범 이후 노동조합의 투쟁은 진보정당 선거운동으로 집중

-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민주노총의 선거 전후한 투쟁 전술은 대중 투쟁보다는 민주노동당 선거 전략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노동조합 투쟁은 크게 없었음.

- 또한 선거 전 투쟁이 있다하더라도 투쟁과 선거운동이 결합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함. 2000년 대우차 파업, 2002년 발전파업과 금속 보건의료 등 시기집중 투쟁,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 한미FTA 집중 투쟁, 2008년 이랜드 투쟁 등이 선거 전 있었으나, 전국적 투쟁 전선보다는 민주노동당 선거 지원이 민주노총 차원의 첫 번째 과제 었음.

- 이러한 양상은 정당과 노동조합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음. 선거 시기 노동조합의 파업을 통한 압박보다는 선거운동이 주류를 이룸.

4>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투쟁 전선 유지 없는 선거운동은 향후 투쟁에 부정적 효과

-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한 기대로 투쟁 전선이 교란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나타났으나, 민주당을 염두해 둔 투쟁 이후 좋은 결과를 얻은 예는 없었음.

- 95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준비위는 한동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정권의 노조 탄압에 소극적으로 대응. 시기집중 임단투나 서울지하철 등의 투쟁이 선거 이후로 밀리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이후 정권의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야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

- 1998년 지방선거를 전후한 총파업 투쟁 전술. 주요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재고 요청이 있었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의 협상을 기대했던 민주노총 여러 진영의 의견이 5~6월 투쟁 전술에 많은 영향을 미침. 이후 투쟁이 7월로 미루어지고, 노사정위 참가 탈퇴를 반복하는 교란이 있었음.

-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민주당(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는 없었으나, 비정규직보호법 한미FTA 등에 대해 진행되던 투쟁이 선거 기간 형애화된 경우.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대승한 이후 투쟁 전선 복귀되지 않으며 이후 계속 투쟁 밀리는 효과.

5. 결론

- 지금까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선거가 노동자 투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는 많지 않음. 외부적으로 정권의 탄압이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거나, 내부적으로 선거운동 몰입이 이미 건설되는 투쟁 전선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았음.

-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요한 긍정적 변수로 한 전술 수립보다는 지방 선거 자체를 운동 내외적으로 극복해야 할 부정적 변수로 한 전술 수립이 필요. 노동조합의 주체적 조건과 여러 정세 요인(1~2월 금속 구조조정 사업장 투쟁, 2~3월 노동부 노조법 시행령, 4월 근로시간면제심의위, 6월 지방선거와 7월 1일 전임자 금지 시행, 상반기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추가 시행, 상반기 금속 임단협 투쟁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투쟁 전술을 수립해야 함.

- 특히 현재 반MB연합 식의 민주당 선거 전술은 투쟁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함.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주당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투쟁의 완급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투쟁 교란 요인이었음.

- 올해 정세는 1995년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보임. 정권의 태도가 노조에 매우 적대적이며,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다는 점, 노동 관련 큰 이슈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그러함. 따라서 1995년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끝>